

尹 “북 도발, 역사 역행하는 위협”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통합방위회의의 주제...“총선 전 사이버 공격 등 차단 시스템 강화”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1일 “북한 정권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 선제 사용을 법제화한 비이성적 집단”이라며 “오로지 세습 전체주의 정권 유지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연초부터 북한 정권은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 민족 개념을 부정한 채 대한민국을 교전 상대국가로 주적으로 못 박았다”며 “반민족·반통일 행위이며 역사에 역행하는 도발이고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또 “올해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치 시스템 핵심인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다”며 “북한 정권은 지난 70년간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시스템 붕괴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고 중요 정치 일정이 있는 해에는 늘 사회 교란과 심리전, 도발을 감행

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집권지 도발, 무인기 침투, 가짜뉴스, 사이버 공격, 후방교란 등 선거 개입을 위한 여러 도발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안보에는 국토 방위 및 국민 안전 수호라는 물리적 개념과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지키는 가치적 개념 2개가 있다”며 “두 개념 모두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기에, 안보 위기가 발생하면 민·관·군·경이 협력하는 국가 총력 대비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 중심의 전통적 군사안보뿐 아니라 민·관·군·경이 합심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가치안보’ 강화도 중요하다는 주문이다.

윤 대통령은 또 “지금의 거의 모든 국민 생활이 온라인으로 연결돼 있어 사이버 공격이 국가 기능과 국민 일상을 한순간에 마비시킬 수 있다”며 “국가 핵심 인프라에 대한 사이버 공격, 가짜뉴스, 허

위 선전·선동을 사전 차단하는 방안 등에 대해 충실히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오늘 회의는 우리의 단합된 의지를 보여주는, 북한에 대한 경고의 자리”라며 “통합방위 구축에 군, 정부 기관, 지자체가 따로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모두발언이 끝난 뒤 각 기관은 현안 보정세, 민방위 대비태세, 통합방위 대비태세 평가 및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한편 중앙통합방위회의는 적 침투·도발 등 국가 안보 위협에 대비해 민·관·군·경의 주요 직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가통합방위태세를 점검하고 발전 대책을 논의하는 회의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제56차 회의를 7년 만에 주재한 데 이어 2년 연속 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장, 국가정보원, 각 군,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등 유관기관 주요 직위자와 민간 전문가 등 170여 명이 자리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유승민 ‘총선 활용법’ 고심

국힘, 안민석 지역구 ‘오산’ 자객 출마·선대위원장 등 수도권 역할론

국민의힘이 당에 잔류하되 공천은 신청하지 않겠다고 한 유승민 전 의원의 ‘총선 활용법’을 고심하고 있다.

당내 비주류로 줄곧 윤석열 정부와 당 지도부에 ‘쓴소리’를 내왔지만, 당을 떠나지 않고 헌신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총선 승리를 위해 그를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수도권 역할론’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유 전 의원이 대권 주자급 중랑갑을 가진 경제동으로 ‘중수정’ (중도층·수도권·청년층)에 소구력이 있다는 점, 경기지사 출마 이력이 있다는 점 등을 고

려한 것이다.

유 전 의원의 활용법을 놓고는 다양한 시나리오가 있다. 수도권 선대위원장을 맡아 바람몰이를 하는 방안, 더불어민주당 5선 안민석 의원의 지역구인 ‘협지’ 경기 오산에 ‘자객 출마’를 하는 방안 등이다.

수도권의 한 의원은 “협지인 오산에는 ‘스타’가 필요하다”며 “유 전 의원이 와준다면 충분히 이끌 수 있는 카드가 될 수 있다. 아주 드라마틱한 게임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 전 의원은 지난 28일 당 잔류의 뜻을 밝히면서 “오랜 시간 인내해왔고, 앞으로도 인내할 것”이

라고 밝혔다. 다만, 총선과 관련해선 “공천 신청은 하지 않겠다”고 말해 ‘불출마’를 명시적으로 언급한 것이 아니니 전략공천 등 투입 가능성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유 전 의원이 총선 역할론을 수락할지를 두고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윤희숙 전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유 전 의원은 ‘멋진 정치인’ 이미지를 복구하고 싶은 것 같다”며 “협지에, 승률이 거의 없는 곳에 가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반면 유 전 의원과 바른정당을 함께 했던 이해훈 전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유 전 의원이 대구·경북(TK)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무한해 2020년에 TK를 포기하지 않은 것으로 들었다”며 “결국 수도권 출마는 안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중대재해법 유예’ 막판 협상 평행선

여 “1년 유예” vs 야 “산안청 설치”... 오늘 본회의 처리 난항

여야가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앞둔 31일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확대 시행을 유예하는 법안 처리 문제를 놓고 막판 협상을 벌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7일부터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된 중처법 시행을 1년간 미루는 법 개정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 설치와 협상의 선제 조건이라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2월 1일 본회의 직전까지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지만, 4·10 총선을 앞두고 각자 지지층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가운데 여전히 합의 전망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관 의정실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40여분간 비공개로 회동해 다음 날 열린 본회의의 안건을 협의했으나, 중처법 유예 법안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고 관계자들이 전했다.

국민의힘은 당초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확대 적용 시점을 2년 늦출 것을 요구해 오던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유예 기간을 1년으로 줄여 서라도 중처법 개정안을 처리하자고 민주당에 공개 제안하며 설득에 나섰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5일 본회의의 전에도 민주당에 “25인 또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법 시행

을 1년간 유예하자”는 타협안을 제시한 바 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내일 본회의 전까지 최대한 민주당을 설득해보려 한다”며 “협상이 잘 되면 내일 본회의에 법안을 올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인들도 국회에 집결해 여론전을 펴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 및 건설업계 17개 협회·단체는 이날 오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처법 적용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등 3500여명(주최 측 추산)이 참석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중처법 시행 유예 법안을 협상 하려면 정부·여당이 산안청 설치를 약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오전 MBC 라디오에서 ‘중처법 시행을 1년간 유예하는 법 개정안을 2월 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는 여당 제안에 대해 “유예 기간을 고무줄처럼 늘리고 줄이는 것 자체가 원칙이 없는 것”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노동계도 정부·여당에 ‘법 개정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며 민주당에 힘을 실었다.

민주노동당 생명안전행동, 정의당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시행 중인 법에 대한 개정 협상에 나선 정치권 행태에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느낀다”며 협상 중단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與 “민주당 ‘전대 돈봉투’ 사과해야”

국힘, 윤관석 실형 선고 비판

국민의힘은 31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무소속 윤관석 의원에 법원이 실형을 선고할 것을 두고 “매우행위만 전하에 드러났다”며 민주당의 사과를 요구했다.

정광재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든 민주당 ‘돈봉투 전당대회’에 대한 첫 사법 심판이 내려졌다”며 “증거인멸, 꼬리 자르기, 정치 공세 속에서도 만인은 법치 앞에 평등하다는 당연한 정의 실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돈봉투 살포로 정당민주주의 전체를 훼손

했고,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나락으로 떨어트린 것은 어떤 범죄행위보다 엄중하다”며 “돈봉투 살포 혐의가 입증되었다면, 받은 혐의가 있는 의원들에 대한 수사는 사필귀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실 앞에 숨은 곳 없다”며 “당 대표를 뽑는 과정에서 혐금이 뿌려진 회대의 사건에 대해 민주당은 이제라도 국민께 먼저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민주당의 대표 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국힘 위성정당 이름은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준연동형 유지시 창당

국민의힘이 4·10 총선에 적용될 비례대표 배분 방식이 현행 준연동형으로 유지될 경우에 창당하기로 한 위성정당 명칭이 31일 ‘국민의미래’로 정해졌다. 국민의미래는 이날 온라인으로 열린 창당 발기인 대회에서 당명을 이같이 결정했다.

선거법상 신당을 창당하려면 중앙당 200명 이상, 시도당 100명 이상의 발기인을 모아야 한다. 국민의미래 발기인으로는 국민의힘 당직자 중

심으로 200명 이상이 참여했으며, 이날 발기인 대회에는 100명 이상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미래는 전국 5개 이상 시도당 창당 대회를 연 뒤 중앙당 창당 대회를 거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 정당으로 등록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정당별 의석수를 나누는 병립형 비례제를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비례대표 배분 방식을 두고 아직 당론을 정하지 못하면서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연합뉴스

한사람의 보험비로
전국민의 경제부담 줄이겠습니다

보험사기 ZERO

- 고의로 보험금을 노린 생명·신체 훼손 행위 NO!**
- 허위 사고, 허위 진단, 과다 입원 행위 NO!**
- 브로커를 통한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 NO!**
- 고의 교통사고, 차량 수리비 과다 청구 행위 NO!**

신고 방법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처벌 사항

10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적용)

신고 포상금

적발 금액에 따라
최대 10억원 지급

경찰청
 금융감독원
 h-well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IAA 한국보험대리점협회